

“정부 지원 빈약”... 대선후보, 소상공인 마음 달래기 나서

李·尹·金 후보, 신년인사회 참석
“추경 14조도 적다” 이구동성
김부겸 총리 “소상공인 희생 보답”

주요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 표심을 잡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연 신년인사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전을 보냈다. 김 총리는 축전을 통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고통과 희생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선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기존 지원책이 빈약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방역 책임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떠넘겼다. 선



(왼쪽에서 3번째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진국에 비해 지원도 미약했다.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론) ‘선지원 후정산’ 방식이 맞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추경 14조원도 적다. 여야가 증액을 합의하면 정부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부담을 소상공인들이 떠안게 돼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주먹구구식 방역 대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빠른 시간 내에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 1차로 50조원 예산이 필요하다. 한국형 PPP제도를 도입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도 낮춰야 한다. 소상공인 특화 공제제도,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대출금융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지금 정부(가 제시한) 추경 14조원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예산 중 재량지출 부문을 구조조정해 1차로 30조원까지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국채를 발행해 2차로 추경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 다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내년 예산 증액분으로 (추가 발행한) 국채를 갚아야 한다. 쓸때는 써야 한다”고 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당내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오세희 소상공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선 후보들께서도 50조, 100조 직접 지원을 언급했고 완전한 손실보상, 피해 업체 전원 보상, 선지원 보상도 약속하셨다. 소상공인 50조 지원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그 절반인 25조 이상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부채 만기 재연장 ▲부채 탕감을 위한 한국형 PPP제

도 도입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대형 식자재마트 등 확장막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도 요청했다.

오 회장은 “연합회가 소상공인의 회복력,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용 공제 제도’ 도입, 소상공인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설립 등도 필요하다”면서 “정책연구소, 복지지원센터 등 소상공인 통합지원의 구심역할을 할 소상공인 전용 복지회관 건립도 절실한 만큼 대선 후보들께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

주무부처 수장인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경제활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바탕에는 소상공인들의 눈물겨운 고통이 있었다.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여기에 대해 호응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동반자로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135조 투입해 300만개 일자리 창출... 유승민 공약도 수용

李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 발표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K-비전펀드’ 50조 규모 조성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135조 원을 투입해 30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일자리가 곧 경제이자, 일자리가 곧 복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은 ▲일자리 창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법제·조직 개편 ▲기업 일자리 성장 ▲혁신형 지역 일자리 ▲청년희망 일자리 등을 담았고, 이를 위한 정책 기조는 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업·지역의 일자리 성장전략, 경제·사회 전반의 통합적인 접근, 선제적이고 정의로운 전환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먼저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신속하고 선

도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혁신형 일자리를 늘리는데 13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초기

·조연결 신산업 육성 등을 비롯해 탈탄소·녹색경제 전환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에코모빌리티 산업 혁신,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 등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공공보건 분야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훈련 강화와 근무환경, 처우를 개선해 사회적 경제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두 번째 순방지 찾은 文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

아랍에미리트(UAE) 실무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오전 UAE 두 번째 순방지인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한다. 한국 대통령이 사우디에 방문하는 것은 7년 만으로, 이번 순방은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디 왕세자 초청에 따라 성사됐다.

사우디는 한국과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중요 협력 대상으로 꼽힌다. 중동 지역에서 유일한 G20(주요 20개국) 회원이자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위 국가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박 2일간 사우디 공식 방문 일정에서 에너지·인프라 건설 분야 중심으로 이뤄진 기존 협력 관계를 수소·방산·교육·과학기술(AI)·보건의료 등 미래 분야로 넓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수출입은행도 한국 기업의 사우디 진출 및 프로젝트 수주 기반 마련 차원에서 문 대통령 사우디 순방 기간 사우디 국영회사와 ‘기본여성약정 주요조건합의서’ 체결을 예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공식 회담 및 공식 오찬을 시작으로 양국 간 협력 분야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사우디는 모하메드 왕세자 주도로 ‘포스트 오일’ 시대 脫(탈)석유 산업 다변화 국가개발전략인 ‘비전2030’ 추진 과정에서 한국과 수소·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의 실질 협력 강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우디가 선정한 ‘비전2030’ 중점 협력국 8개국에 포함된 만큼, 양국은 지난 2017년 이후 ‘한-사우디 비전2030 위원회’를 두 차례 열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도 지속해 오고 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대선후보, 사회복지사 만나 “처우 개선” 한 목소리

李 “공공만이라도 불안정 대가 지급”
尹 “천차만별 처우 시스템 불공정”

사회복지사들이 공익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에 따라 임금 및 복지의 차별로 인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됨에 따라 여야 대선 후보들은 사회복지사의 임금과 처우 수준을 끌어올리고 근로조건을 향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다수의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 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가이드라인 대비 78~97% 수준이고, 10년 차의 경우엔 최하 57%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첫 번째로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청년사회복지사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적은 희한한 사회”라며 “공공에서만이라도 최소한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추가 지급하고, 동일한 일에는 동일한 대가를 지급해서 어려운 일을 하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에

열린 간담회를 통해 소속 기관마다 다른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다. 사회복지사들이 공공기관 등에 소속해서 일하기 때문에 기관마다 일은 똑같지만, 기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처우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에 사회복지사 공약으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양성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들을 일원화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전날(17일)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단일임금체계, 호봉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과 위상이 근본적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단일임금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7일 사회복지사의 임금 수준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사회복지사의 대우가 서울시가 제일 좋을 텐데, 서울시 기준으로 임금을 상향 단일화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근로 조건을 향상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